

野3당 “특공 국정조사 받아라” vs 與 “경찰 수사가 먼저”

관평원 궤 ‘공무원 특공’ 국회 대책 놓고 여야 대치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국조 요구서 공동 제출 野 “부당이득 환수”...국조특위, ‘여야 동수’ 요구 민주당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본 이후도 늦지 않아”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로 촉발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에 대한 조치를 놓고 여야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야당에 정의당까지 가세한 야3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자칫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특공 뇌관을 놓고 여야 간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야3당 소속 의원 1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평원 사례를 언급하며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는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

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복도시(세종) 특공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범위는 ▲분양 당시 소유 주택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 ▲현 소유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시세차익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 활용 중복 분양취득 여부 등을 지목했다.
아울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0명으로 하되 여야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관례상 여야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는 위원 구성을 동수로 요구한 것은 특공 국조를 고리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 셀프조사에 맞선다며 LH 사태처럼 응두사미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민주당이 반대할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수위를 압박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전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 부처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국민의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도록 국회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경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있고 거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나아가 “공직자와 대기업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정의당 이은주(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해 당당하고 멋있게 국회가 투기 근절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려면 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조사 얘기를 꺼내는 것이 도리”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이낙연, ‘벼랑 끝’ 소상공인 위해 ‘선대출 후정산’ 제안

“고용 안정 위해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지원한 뒤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사상화와 해법 토론회’에서 “빚을 내 버티다 못하면 폐업하고, 폐업하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그마저도 안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처지로,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며 “먼저 초저

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인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도 건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 달러(한화 약 119억원)를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쓰게 해 일정 기간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준다.
이 전 대표는 “K-방역을 떠받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나”며 “소상공인의 고용 지키기가 곧 일자리 지키기이기 때문에 PPP를 한국판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용해 조기에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임대료 지원”이라며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또 자신이 당대표 시절 제안한 상생연대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국회 통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넓은 좌파’ 비판 송영길, 의원들에 “우린 시민단체 아냐”

“비판·지적 할 수는 있지만 국민 삶 책임질 ‘주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소속 의원들에게 “우리는 집권 여당이다.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필 비판하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정부를 일하

게 하고 국민의 삶과 안보를 책임져야 할 당연한 주인이고 주류”라고 했다.
이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의원들의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 내용이 내년 3월 9일 국민의 민심을 다시 얻어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도록

판단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략 파트너십을 만들어낸 이 큰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당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이런 정상회담의 성과가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에서 여러가지로 뒷받침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文정부 ‘꼰대’에 빗댄 김기현 “대선화두, 내로남불 청산”

“정권교체 만들 역사적인 전당대회 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5일 당권 주자들을 향해 “현 정권은 국민들의 부동산, 일자리, 미래 희망은 다 걸어서 버리고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이 돈 몇 푼 쥐어주면서 마음을 사려고 하는 꼰대정권”이라며 “당대표 후보들이 선명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외연을 확장해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결실을 거두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한

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대행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역사적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내년 대통령 선거의 화두가 될 시대정신은 ‘내로남불 청산’”이라며 “이 정부는 입만 열면 버릇처럼 공

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속내는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나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전당대회의 첫 단추를 꿰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와 달리 우리 전당대회는 많은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 후보들 모두 우리당의 귀한 보배고 자산인 만큼 선명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